

[경제]

산업 과소비 탓



소비자 '바가지'

서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를 내려야 한다는 여론의 십자포화에도 아랑곳없이 정부는 세금을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세금인하로 유류가격을 선진국보다 낮게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고유가를 정유업체와 주유소업체의 문제로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우려하는 에너지 소비는 국민들이 자동차 등 수송용 기름을 낭비해서가 아니라 에너지 과소비형 산업구조가 큰 요인이며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려면 관세구조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름값이 많이 쓰는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관세를 없애야 석유소비가 통제되고 경쟁의 기반이 마련된다는 얘기다.

◇'기름 과소비'는 산업구조 때문 =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지난달 발표한 '2006년 한국 에너지정책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석유소비에서 산업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43%(2004년 기준)다.

IEA는 이에 대해 "IEA 평균치의 2배 정도"라며 "한국은 석유소비에서 여타 IEA 회원국에 비해 산업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 IEA '2006년 한국 에너지정책 평가보고서'

산업분야 비중 43%...회원국 평균의 2배

에너지 과소비형 산업·관세구조 바꿔야

다. 두번째인 수송분야 비중은 37%로, 50% 이상인 IEA 평균에 비해 크게 낮다. 차량운행 감축 등으로 절감할 수 있는 부분보다 산업구조 전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절감폭이 더 늘 수밖에 없는 구조다.

중동산 두바이유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고유가 상황에서 지난해

름소비는 놔둔 채 정부는 생활필수품을 가동하거나 생계를 위해 불가피하게 휘발유 경유를 써야하는 일반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고 있는 셈이다.

적용하라"=IEA는 한국 에너지정책 평가보고서에서 "정책당국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장을 면밀히 감시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휘발유 등 석유제품과 원유 사이에 다르게 적용되는 관세를 동일하게 할 것을 권고사항으로 적시했다.

현재 원유에는 1%, 석유제품은 5%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IEA는 "(원유와 석유제품간) 차등화된 관세는 수입제품에 비해 국내 정제제품에 이익을 주고 있다"면서 "모든 대형 정유사들이 소매판매부문을 갖고 있어 이런 정책은 국내 정유·소매업체들을 보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석유산업 구조상 차등화된 관세가 시장의 경쟁을 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지만 정부는 내달부터 석유제품에 할당관세를 적용, 관세율을 3%로 낮추는데 그쳐 '생색내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연립뉴스

작년 토지보상금 23조6천억 96%가 현금 지급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등으로 인해 땅을 수용당한 뒤 채권으로 보상받은 경우는 총보상비의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모두 현금 보상으로 작년 총보상금 23조6천억원 중 22조6천억원 가량이 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17일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에 따르면 작년에 이들 2개 기관이 공공사업을 하기 위해 지급한 토지보상금은 16조 5천억원이며 이중 채권으로 지급된 금액은 4.2%인 7천5천억원에 그쳤다.

토지공사의 경우 9조5천억원 중 5천905억원을 채권으로 지급해 전체의 6.2%였으며 주택공사는 7조원 중 1천100억원이 채권 보상이어서 1.6% 수준이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이 보상한 금액을 포함해 작년의 토지보상 규모는 23조6천억원이어서 채권보상은 1조원 안팎에 그치고 나머지 22조6천억원은 현금으로 보상된 것으로 추정된다.

채권보상은 작년 3월부터 도입된 제도로 토지보상금이 다시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현금이 아닌 3년만기 채권으로 보상을 준다.

연립뉴스

4조원대 주식보유 재벌 가족 나왔다

증시 활황...1조 이상도 10곳

코스피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증시 활황이 이어지자 상장사 보유지분의 가치가 4조원대에 달하는 재벌 가족이 등장했다.

또 상장사 지분가치 평가총액이 1조원을 넘는 재벌가도 10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세계 전문 사이트인 재벌닷컴이 1천707개 상장사의 대주주 및 일가족 3천700명이 보유한 주식가치를 14일 종가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신석호 롯데그룹 회장의 직계 가족이 보유한 지분의 평가금액이 4조2천847억원으로 가장 컸다. 신 회장(5천480억원, 이하 평가금액)의 직계 가족으로는 아들인 신동빈 부회장(1조8천100억원)과 신동주 일본롯데 부사장(1조7천488억원) 등이 있었다.

2위는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1조8천956억원)의 직계가족으로 아들인 정운진 부회장(1조660억원), 딸인 정유경 조선호텔 상무(3천84억원) 등이 보유한 상장사 지분의 가치가 3조2천737억원에 달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일가는 정 회장(2조5천952억원)과 그의 아들인 정인선 기아차 사장(6천188억원) 등 직계 가족이 모두 3조2천179억원을 보유, 3위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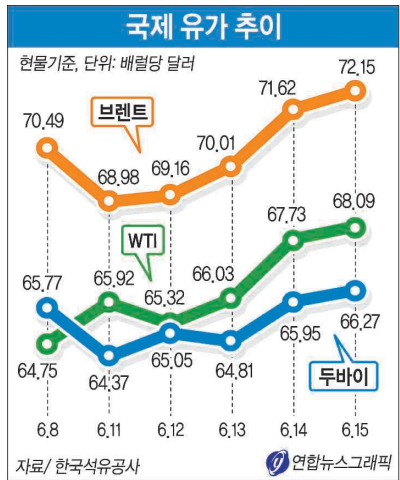
삼성가는 이경희 삼성그룹 회장(1조7천250억원)과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4천883억원)가 보유한 상장사 지분가치가 2조8천425억원으로 평가돼 4위를 차지했다.

개인별로는 최대 주식보유인 정몽준 국회의원이 보유한 현대중공업 지분 가치는 2조6천518억원으로 가문별 순위에서는 5위를 기록했다.

연립뉴스

원유도입 단가 배럴당 66달러 돌파

7개월 만에 최고



국내 석유류 제품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원유도입 단가가 7개월 만에 배럴당 66달러를 돌파하며 최고 수준을 보였다.

연립뉴스

특히 원유도입 단가가 국제유가의 상승세로 3개월 연속 올라가고 있어 휘발유·경유 등 국내 석유제품의 가격상승을 압박할 것으로 우려된다.

17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원유도입 단가는 배럴당 66.15달러로 지난해 10월의 배럴당 66.31달러 이후 처음으로 66달러를 넘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원유도입 단가는 국제유가에 운송요금·보험료 등을 더해 산정되는 가격으로 국내로 들어오는 실질적인 원유가격이기 때문에 공장에 가격과 소비자 가격에도 영향을 준다.

원유도입 단가는 지난해 10월 이후 11월 60.94달러 12월 57.34달러, 올해 1월 57.20달러, 2월 54.46달러 등으로 내림세를 나타냈지만 3월 들어 58.44달러로 오르며 4월에는 61.96달러로 60달러를 넘었고 5월에도 상승세를 지속했다.

가계자산 81% 부동산에 편중

현대경제연구, 재무구조 개선 시급

우리나라 가계자산의 81%가 전·월세 보증금을 포함한 부동산에 편중돼 있어 재무구조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7일 '한·미 가계자산 비교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지난해 5월 현재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가구당 평균 총자산 2억8천112만원 중 76.4%는 부동산에 편중돼 있다"면서 "전·월세 보증금도 부동산으로 볼 경우 가계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81%로 높아진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 가계의 경우 가계 총자산에서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60% 이상으로 금융자산 비중이 실물자산보다 높다는 게 연구원의 지적이다.

아울러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현금과 예금보유를 선호해온 데다 외환위기 이후 안전자산 선호경향이 심해져 아직까지 개인금융자산 중 안전성이 높은 예금이 50% 정도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연립뉴스

그러나 미국 가계를 보면 금융자산 중 주식관련 직·간접투자 상품의 비중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예금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게다가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비율은 2.12로 미국의 3.16에 비해 낮았고, 개인총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도 1.52로 미국의 1.39에 비해 높은 편이 아니라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단기차입비중도 미국보다 높아 가계의 재무구조 건전성이 미국에 비해 열악하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연구원은 "우리나라 가계는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실물자산 보유가 과잉 상태여서 자칫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다"면서 "현재 가계의 재무구조는 부동산 가격 하락 우려가 현실화 될 경우 유동성 면에서 고정 실물자산, 단기 금융부채라는 자산·부채의 불일치 현상에 노출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로또복권 (제237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당첨자 수
01 11 17 21 24 44	33	
등위	당첨금(원)	
1	6개 숫자 일치 1,440,630,729	7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43,095,792	39
3	5개 숫자 일치 1,530,725	1,098
4	4개 숫자 일치 58,626	57,338
5	3개 숫자 일치 5,000	974,357

팝콘복권 (제60회)

등위	당첨금(원)	당첨번호
1	10억	3조 450792
2	5억	3조 450791
3	3조	3조 450793
4	1천만	1등과 조가 다른 번호
5	1백만	각조 55247
6	1만	각조 210
7	2천	각조 99
		각조 61
		각조 1
		각조 7



USB 타입 MP3플레이어 출시

동과 볼륨이동을 할 수 있으며 66시간 음성 녹음이 가능하다.

삼성전자가 17일 출시한 USB 타입의 슬림형 MP3플레이어 YP-U3를 한 홍보도움이 선보이고 있다. 이 제품은 터치패드 방식을 채택해 손쉽게 메뉴이동과 볼륨이동을 할 수 있으며 66시간 음성 녹음이 가능하다.

연립뉴스

'평' '돈' 등 非법정계량단위 내달부터 단속

105.78㎡ 아파트 몇 평이야?

시민들 혼란 우려

다들달부터 실생활에 널리 쓰이는 도량형 사용규정이 법정단위로 바뀌지만 계도기간이 짧아 혼란이 우려된다.

17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7월부터 평·마지기 등 면적을 나타내는 단위는 ㎡, 인치·자·야드 등 길이단위는 cm 또는 m, 근·돈·냥 등 무게단위는 g과 kg 등 법정단위로 각각 변환해 표기해야 한다.

정부는 부동산계약서를 비롯해 광고, 상품 설명서 등을 집중 점검해 이를 어길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기존 비법정단위를 병행 표기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비법정단위 사용을 금지한 계도기간이 1년도 채 안돼 소비자들이 새 단위에 익숙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단속에 나서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도량형 변경해 가장 민감한 곳은

구분	법정계량단위	비법정계량단위(단속 대상)	비고
길이	센티미터(cm)	자(尺), 인치, 야드	1자=30.303cm 1인치=2.54cm
	미터(m)		
넓이	제곱미터(㎡)	평(坪), 마지기	30평=99.15㎡ (1평=3.305㎡)
	제곱센티미터(㎠)	홉, 되, 말, 가마	1되=1803.9㎠ 1말=18039㎠
무게	그램(g)	근(斤), 관(貫), 돈, 냥	1근=0.6kg 1돈=3.75g
	킬로그램(kg)		(출처:산업자원부)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이다. 김민경(여·39·광주시 남구 진월동)씨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표기된 105.78㎡가 몇 평인지 잘 몰라 고생이 많은데 부동산 실거래때까지 ㎡로 사용하면 105.78㎡가 32평형인지 어떻게 알겠느냐"고 말했다.

광주시 남구 진월동 '골림쇠공인중개사' 김대원 대표는 "정부의 입법취지가 공감하지만 '평'에 익숙해진 사람들에게 평에 대한 병기도 금지한채 ㎡만 사용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지 벌써부터 걱정이다"고 말했다.

반장 다음달 입주자모집공고나 분양 안내서부터 평형 대신 ㎡를 써야 하는 건설업계에선 일부 건설사들이 ㎡ 단위가 익숙해질 때까지 '34평형' 대신 '34형'이나 '34타입(TYPE)'을

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은방과 전자업체도 골머리를 앓기는 마찬가지다. 광주시 동구 충장로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는 이모씨(42)는 "돌반지를 1돈, 2돈 대신 3.78g, 7.5g 하는 식으로 설명하면 속이는 것 아닌가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전했다.

광주 금요일드네 한 전자매장 관계자는 "40인치 TV를 cm로만 표기하면 너무 혼란스러울 것 같아 '40인치' 대신 '40형'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최근 나온 카탈로그를 보면 인치, 평 대신 cm와 ㎡로 일단 규격을 표시해 놓고 주석을 달아 인치와 평으로 환산된 내용을 안내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필수기자 bungju@kwangju.co.kr

준조세 성격 각종 부담금

10년 새 두배 이상 늘었다

개인이나 기업에 부과하는 준조세 성격의 각종 부담금 징수가 지난 10년간 두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이 1년간 부담하는 조세와 각종 사회보험료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국민부담률이 지난해 26.7%를 넘어 1997년의 21%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17일 공개한 '2006 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부담금 징수실적은 1997년 5조4천281억원에서 2006년 12조619억원으로 10년간 2.2배로 증가했다.

부담금 징수는 IMF 사태가 본격화된 1998년(3조8천967억원) 이후 2001년(4조8천497조)까지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1년(7조891억원)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2004년(10조41억원) 10조원대를 돌파했다.

연립뉴스

대기업 하반기 9천700여명 채용

국내 주요 대기업 2곳 중 1곳 이상이 올해 하반기에 4년제 대학 정규직 신입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며 채용규모는 9천700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온라인 리크루팅 업체 잡코리아(www.jobkorea.co.kr)에 따르면 최근 매출액 기준 상위 100대기업 중 85개사를 상대로 올해 하반기 채용전망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기업의 57.6%가 모두 9천766명을 채용할 계획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하반기 100대기업 채용예상 인원인 9천438명에 비해 3.5% 증가한 것이다.

조사대상기업 중 하반기 채용계획을 아직 정하지 못한 기업은 30.6%, 채용계획이 없다는 기업은 11.8%였다. 업종별 채용예상 인원은 전기·전자(2천586명), IT·정보통신(1천128명), 금융·보험업(1천76명), 기계·철강(1천70명), 자동차·항공(990명), 유통·무역(825명), 건설(615명), 석유화학(42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립뉴스